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지역기업 5년간 소득·법인세 100% 감면 등 특구 실효성 ↑

지방정부 특구지정 권한 확대
주택 특별공급 등 정주여건 개선
지방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정부가 14일 발표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등 4개 특구 신설이 핵심이다. 특히, 특구 지정에 대한 지방정부 권한을 대폭 확대해 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5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방 역세권 요지에 지방관 '판교테크노밸리'도 조성한다.

◆ 기존 특구 한계 극복... 세제감면·규제특례 부여

지방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좋은 일자리가 필수다.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의 지방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선 기업이 함께 해야 한다.

그간 다양한 경제특구가 지방에서 운영돼 왔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부 주도 특구 설계와 지정으로 지방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특구를 만들어 놓아도 기업들이 입주하지 않거나, 특구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수준 또한 기대보다 낮아져서다. 또 인센티브가 초기 투자 지원에 한정돼 기업의 중장

기 성장을 이끌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기회발전특구는 이런 점에서 기존 특구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상의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지방정부의 주도로 수립한 특구 계획에 따라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기존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 후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를 이연하며, 창업 및 신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 깎아준다. 신규 취득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 5년간 100% 감면 후 5년간 50% 감면을 적용한다.

또 기업의 지방투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에 대해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긴다. 이와 함께 ▲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지방에서 일하기 좋은 정주 환경을 마련한다.

◆ 지역 맞춤형 공교육 혁신, 상향식 정책 가능케

특히 지방에 거주해도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 없이, 지역인재가 공교육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공교육 내실화를 골자로 한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등을 종합 지원하는 체제 도입이 목표다.

지역 공교육 혁신·인재양성 지원
문화특구 도시별 최대 200억 투입
연내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지역맞춤형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교육 발전전략을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이와 같은 지역 수요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이달 중 정부 시안을 발표하고 11월 공청회 개최 등을 거친 후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올해 12월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되고 2024년부터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정부가 디자인하고 여러 부처가 집중 지원하는 지방

시대 대표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와 삶, 여가가 집약되는 복합거점을 조성한다. 기존에 도시 외곽에 추진됐던 지역 개발과 달리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의 발길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 도심융합특구는 도시·건축 파격적 혜택

도심융합특구에서는 도시·건축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해 도심에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토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해 각각의 특구가 가지는 혜택을 누리게 할 방침이다. 또 입주기업의 창업지원과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부처별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기업 지원에 나선다. 올 하반기 '도

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지역별 특색을 살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된다.

아울러 '로컬리즘(지방다움)'을 콘텐츠·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지방 관광 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지역 문화·콘텐츠진흥사업인 문화특구 지정도 본격화된다. 올해 12월 7개 권역별 13개 문화특구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씩 지원하고, 내년에는 지방 공연예술단체와 지역 공연·전시의 창작·제작·유통에 총 490억원을 투입한다. 로컬 여행 콘텐츠를 활용한 위케이션 프로그램과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체류형 여행 모델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주요 내용

비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목표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

5대 전략

자율성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4대 가치

자율 | 공정 | 연대 | 희망

자료/지방시대위원회

尹 대통령 “15개 국가 첨단산단 조성... 5개 이상 디지털혁신지구 만들 것”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
말뿐인 과거 전철 밟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

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해야 한다”며 “그라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해 왔다”며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를 비롯해 세 차례의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방시대 해법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으로 공정한 접근성, 지역의 재정 자주권 강화, 지역 스스로 발굴한 비교 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해 왔다”며 “그리고 교육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고 역설해 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의 산업단지에 주거 시설과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할 것”이라며 “15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별로 거점을 육성함과 아울러 1000개 이상의 디지털 기업이 집적되는 디지털 혁신지구를 5개 이상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 누구나 거주지

인근에서 필수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역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접근성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는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에 변변한 쇼핑물 하나 짓지 못한 채 어처구니없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께서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국민과 늘 함께 할 것”이라며 “이제

는 지방시대다. 지방시대가 곧 기회다.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냈다.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에 대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지방시대 비전을 공유하고, 지방발전 전략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방시대를 주요 국정목표로 삼고, 3차례에 걸쳐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